

데이터 시대, 저널리즘 그리고 인격권

‘데이터 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디어 환경에 가져온 변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 문구다. 전통적인 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이 ‘메시지’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보다 작은 단위인 수치나 부호 형태의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세계 최초로 5G 통신 상용화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데이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송수신할 수 있게 된 환경 속에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이 결합함에 따라 데이터 중심으로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1월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데이터 시대의 저널리즘 영역은 보다 확장되고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 시대의 저널리즘은 다양한 법적·윤리적 쟁점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통찰과 공리 창출 가능성이 커졌지만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데이터 시대에 적합한 인격권 보호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또, 데이터 시대는 저널리즘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공영역이나 정치·경제적 권력에 대한 감시 외에도 알고리즘과 같은 기술에 대한 감시 역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편, 데이터가 집중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문제 역시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영역에 대한 전통적인 정보공개청구 외에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부과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번 〈미디어와 인격권〉에서는 ‘데이터 시대, 저널리즘 그리고 인격권’이라는 대주제 하에 관련되는 다양한 논점들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 다음 주제들을 포함해 데이터 시대와 저널리즘, 그리고 인격권에 대한 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 데이터 시대의 인격권 보호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최근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인격권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정보의 산업적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정보, 그 중에서도 개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가 형해화될 수 있는 위험 또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이나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와 같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이유다. 이에 따라 데이터 주도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데이터 시대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고 관련 해외법제 동향 및 국내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 데이터 시대 저널리즘의 쟁점과 새로운 역할

데이터 시대는 저널리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쟁점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감시견(watch dog)으로서의 언론은 기존의 정치·자본권력에 대한 감시를 넘어 기술에 대한 감시로 나아가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매체인 '프로퍼블리카'에서 페이스북의 정치광고의 편향성을 밝혀 개선책을 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또 미국 여러 주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콤파스(COMPAS)가 흑인을 차별한다는 사실¹⁾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데이터 시대에는 언론의 핵심 기능인 권력 감시가 알고리즘의 편향성·공정성과 같은 기술에 대한 감시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저널리즘의 역할과 새로운 규범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집중과 액세스(access)권 개념의 재정립 논의

시민의 공적 영역에 대한 권리로 출발한 액세스(access)권은 언론에 대한 접근권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했다. 데이터 시대를 맞아 액세스권은 또 다른 형태의 변용을 요구받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점차 언론 영역에서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특정 플랫폼에 데이터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액세스권의 보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는 사적 주체로서 액세스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데이터의 공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도 정보제공 의무를 지니는 공적 주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액세스권 이론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집중 문제를 다뤄보고, 본 주제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위한 액세스권의 보장 범위와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 독립언론사인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의 '기계의 편향 (Machine Bias) 시리즈'가 대표적 예시임.(참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18-30-03 지능정보화 이용자행태 조사방법론 개발 및 실증, 연구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공공영역에서의 실효적 정보공개청구제도 방안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공 분야의 정보를 활용한 기사 작성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행 정보공개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공개사유를 들어 정보 비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를 공개하되 가공되거나 변형된 2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저널리즘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 정보에 대한 실효적 공개청구 방안이 무엇인지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

개인의 인격권과 알고리즘 기술이 충돌하는 이슈들이 등장함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이와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알고리즘 기술, 특히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알고리즘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인식은 미진한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상용화됨에 따라 AI 스피커 중 하나인 '아마존 에코'가 부부 간의 대화를 녹음해 지인에게 전송한 사례라든가, '구글 홈 미니'가 오작동하여 집안 대화를 무작위로 녹음한 사례와 같이 이용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음성 데이터 녹음 내지 전송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알고리즘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파악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피해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 <미디어와 인격권>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이며, 올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